

노동운동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과제

1998년이래 노동운동은 매년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투쟁이 조직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것은 파업을 조직하려는 주체들의 자원과 능력이 부족한 때문이기도 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노동자들이 사회적·심리적으로 위축된 때문이기도 했다. 1999년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노동자들이 사회적·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동안 변화된 사회구조와 경제질서에 혼란스러워하면서 걸피를 못잡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편이다. 노동운동 주체 역시 변화된 상황과 조건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적절한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지 못하고 "1987년 노동체제"의 산물인 투쟁과 동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4.13 총선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 좌절과 남·북한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정치사회적 입지를 급속도로 축소시키고 있지만, 진보진영은 아직 별다른 정치적·조직적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 총총은 상반기에 총파업을 조직하려 했지만, 4월 자동차 4사 파업과 7월 금융부문의 파업을 빼고는 별다른 사회적 파장을 미치지 못했다. 운동 일각에서는 노동운동의 혼란과 진보진영의 위축에 대해 '정권과 자본의 공세'를 탓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현재의 국면을 "공안탄압"이라 규정하는 것도 그리 정확한 정세진단은 아닌 듯하다. 하반기에도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총파업의 목표와 대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체의 역량을 고려할 때 "총파업 아닌 총파업"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무너져 내리고 있는 "1987년 노동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노동체제"가 성립될 때까지는 운동진영의 "혼란과 위축"은 꽤 오래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제 막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체제"의 성격은 조만간 그 모습을 드러낼 변화된 사회구조와 경제질서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양대 총총으로부터 상반기 투쟁 평가와 하반기 과제를 들어보았다. 독자들이 현시기 노동운동의 상황과 조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민주노동 상반기 투쟁 평가와 하반기 사업방향 김태원
한국노동 상반기 투쟁 평가와 하반기 과제 이정식

민주노총 상반기투쟁 평가와 하반기 사업방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1. 들어가는 말

1998년 이후 2년 연속 IMF신탁통치 하에서 패배와 후퇴를 거듭해온 민주노총에게 2000년은 여전히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힘겨운 조건과 산하 조직들은 연이은 투쟁의 피로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경기 회복과 더불어 4월 총선국면에서 그동안 구조조정을 강요해 온 김대중 정권이 노동자·민중의 IMF피해 원상회복과 개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으로 국면이 전환하고, 총선 정국에서는 여러 세력의 요구가 분출하고 정치쟁점화 될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것으로 보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민주노총은 상반기 총파업투쟁을 결의하였다. 이 글은 이 투쟁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상반기 투쟁 경과

① 임단투 및 총파업 투쟁



▲공약집안 반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 6월 이후 민주노총이 조직한 집회는 수백 회가 넘었으며, 연인원만도 10만 명을 넘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18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다음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 노동시간 단축
- IMF피해원상회복과 구조조정 중단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사회보장예산 확대

그리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5월말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총파업을 수행하기 위해 2, 3월에 교육·선진 사업이 집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간담회, 강연회, 간부결의 대회 및 중앙지도부의 지역순방이 이루어졌으며, 각 연맹별로 약 450개 노

조에서 1노조 1교육이 실시되었다. 선진 은 조합원 대상 9만 7천 부, 45만 부의 대 시민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총 4회에 걸쳐 선진전이 지역별로 시행되었다.

또 5월 총파업투쟁 이전에 몇 가지의 주요한 투쟁, 즉 신선대·우암노조 투쟁, 철도노조민주화투쟁, 축협노조투쟁, 사회보험노조투쟁 그리고 자동차 4사 투쟁 등 3, 4월 기간에 주로 구조조정을 중심과제로 하는 일련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자동차 4사 투쟁은 투쟁돌입 전까지 파업투쟁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약 10만 여명이 1주일 이상의 파업투쟁을 성사시켜 5월 총파업 투쟁을 조

직하는 데에 대중적 자신감을 주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2000년 상반기 투쟁에서 공동투쟁체인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를 결성하여 2차례에 걸친 민중대회를 통해 민중운동전선의 단합과 연대 그리고 신자유주의 반대전선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 동안의 투쟁동력을 총집결하여 4월 29일 지역별로 노동절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5월 31일 총파업투쟁에 돌입하였다. 5월 31일 총파업투쟁에 돌입한 노조는 139개였으며, 조합원수는 7만 명을 상회하였다.

6월 10일 민중대회 이후 총파업투쟁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고, 입단투 투쟁에 대한 지원과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6월 29일 롯데호텔 노조, 7월 1일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전면적 침탈과 구속·수배 등 군사정권에서도 보지 못한 공안탄압이 자행되었다. 정부는 의사파업 등으로 잃어버린 공권력의 위신 회복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분쇄, 그리고 민중적 통일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목표로 삼아 테러진압부대를 앞세워 연막탄을 터뜨리고 조합원을 연행하였으며, 한 나라 노동자조직의 대표를 구타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에 대응해서 민주노총은 위원장 단식농성과 산별 대표자 천막농성, 그리고 단위노조대표자 농성돌입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그동안 집회와 시위만

도 전국적으로 수백 회를 조직했으며, 참여한 연인원만도 10만 명을 상회한다. 민주노총은 현재 롯데와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경찰력 투입 이후 8·15가 다가오는 지금 시점까지도 차가운 시멘트에서 천막농성과 위원장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동자, 농민 등 민중에 대한 공안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④.4.13 총선

상반기 투쟁 과정에 자리잡았던 4.13 총선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이라는 법제도적 환경 변화와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원과 결합 하에 창당된 민주노동당의 등장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대중적 토대가 구축된 속에서 이루어진 선거였다. 민주노총은 4.13 총선을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켜내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정치교육의 장으로 만들어나갔으며, 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략' 지구에서의 의회진출을 꾀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21명의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였고 그 중에서 10명의 민주노총 후보를 내보냈다. 또 정치자금으로 1억 4천만원을 모금하여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후보에게 전달하였으며 조합원 중에서 6,600여명(전체당원

절반)의 당원을 모집하였다. 아울러 약 47회의 총선관련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민주노동당후보들은 21개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22만 3천표를 득표했으며, 출마지역에서의 평균득표율은 13.1%로 14대 총선에서 민중당이 얻은 득표율의 2배를 기록하였다. 그 중에서도 울산북구와 창원읍의 경우 당선권에 육박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동차완성 4사의 투쟁은 선거와 투쟁의 일정한 결합을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3. 상반기투쟁에 대한 평가

① 성과

민주노총의 상반기 투쟁은 다음 몇 가지 성과를 낳았다.

첫째, 3대요구 중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요구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으로써 하반기 투쟁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특히, 노동시간단축은 대통령이 그 이행을 공언했고 노동부장관이 정국회 법안상정을 천명하여 하반기 투쟁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으로써 하반기 제도개혁투쟁을 위한 조건을 형성했고, 상당수 단위노조가 단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이뤄냄으로써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각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

을 대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의 해당주체들의 노력도 큰 역할을 했다. 6월 7일 현재, 단협협약 교섭을 마무리한 노조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보인 내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이다. 타결 노조 146곳 중 29곳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셋째, 총파업투쟁의 엄호 하에 단위노조는 예년에 비해 높은 임금인상을 쟁취했고, 이는 3대 요구의 하나인 IMF원상회복 요구의 성과이기도 하다. 6월 7일 현재, 전체 소속 단위노조의 54.3%인 759개가 임금교섭을 시작했으며, 그 중 임금교섭을 타결한 곳은 207곳으로 전체 소속 노조의 14.7%에 이른다. 6월 7일 현재, 요구안을 확정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총액임금기준으로 평균 14.8%이며, 기본급 기준으로는 14.0%다. 이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 때 98년과 99년보다 훨씬 높은 요구수준이며, 97년의 11.8%(8만 2,174원)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② 문제점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민주노총 상반기 투쟁은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첫째, 총력 투쟁이 힘있게 조직되지 못하고, 그 집행이 올바르게 담보되지 못했다. 전체 조직의 과반수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전체 파업

규모는 부분 파업을 포함하여 최대 7만 명 수준이었고, 이것도 6월 3일 이후에는 그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금속·공공 등 주요 연맹의 조직 피로도가 충분히 극복되지 못한 측면과 더불어, 조직적으로 결정한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동력을 모으지 못한 각급 조직의 집행력 문제,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 차원에서 각 조직의 동력을 충분히 발전시켜내지 못한 한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후에도 민주노총 투쟁방침의 힘있는 집행을 담보해내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3대 요구 중 구조조정 문제나 사회보장 관련 요구들이 사회적 쟁점으로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 특히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정권은 대우자동차 등 자동차 완성사와 축협 등에서의 구조조정과 정리 해고에 공세를 가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반기 투쟁에서 이들 사안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해 여전히 수세적인 위치를 면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사회보장 요구는 사안의 성격상 하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나, 상반기 투쟁과정에서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여론형성, 사회보험노조 투쟁,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남북정상회담 정국에서의 군축문제 등을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특히 4월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을 반대하는 자동차산업투쟁은 5월 총파업투쟁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차원

정부는 피서피업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면서도 노동자들의 피업은 강경하게 대처하여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에서 총괄하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

셋째, 상반기에 노사정위원회 위상이 보다 실추되고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정 직접 교섭을 이뤄 내지 못했다. 하반기에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시키려는 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부터 노사정의 틀 바깥에서 민중적·범국민적 지지와 연대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③ 4.13 총선투쟁 평가

총괄적으로 평가한다면 4.13총선은 비록 의회진출에 실패했으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선거였다. 선거과정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참여와 조직화가 정비되었고, 선거 직후에도 민주노동당이 와해되기는커녕 의연하게 조직이 확대되고 재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 살아있는 예이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신자유주의 반대와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보다 분명히 부각시키고 나아가 전국적 쟁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한계는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완성사의 해외매각반대파업이 전개되었음에도 이를 쟁점화하지 못했고, 국부유출문제나 IMF 관리체제로 인해 피해해진 민중생존권의 문제·빈부격차 문제·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사회복지의 후퇴 등의 문제를 설득력있게 알려내지 못했다. 그리고 여론의 스포트

라이트를 받았던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가져온 부정적 측면, 즉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허무주의'를 조장한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한편으로 선거를 전후해 울산북구에서 발생한 내부의 분란은 당내민주주의 문제와 더불어 민주노총 후보의 선출과정이 책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남기기도 하였다.

4. 하반기 사업방향

2000년 하반기에 민주노총이 실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노동조건 개악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 노동시간 단축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 사회보장 예산 확보
- 국가보안법 철폐

하반기에 들어서 김대중 정권은 남북 정상회담을 빌미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을 고립시키고 탄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는 한국통신, 한국전력, 철도, 한국중공업 등의 공기업에서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 남북경협, 이산가족 상봉, 연내 고위급 인사 및 김정일 방한, 국가보안법 개폐 등의 굵직한 사안들이 전

개될 것이다. 한편으로 냉전적 반공·반북 분위기가 완화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철폐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 요구와 주한미군기지 반환 요구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추세와 맞물려 남북관계 및 통일 정세에서도 정부·자본과 운동진영간의 각축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경총이 노동시간 단축의 전제조건으로 월차 생리휴가 폐지, 변형근로제 확대,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인하를 제시한데서 드러나듯,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노동조건 개악과 연계된 노동시간 단축,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통일투쟁,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일·한미투자협정 등의 과제에 대응한 하반기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10월 20일경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개최시기에 즈음하여 총력대응을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대정부 교섭 틀과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틀을 무력화하고 현재의 노정교섭 형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8~9월 교육·선전 기간을 통해 충분한 대중적 동력을 결집하고 구조조정 저지투쟁 등 사안별 투쟁을 전개하면서 10월 20일을 전후해

서 대규모 상경노숙투쟁을 전개하여 10월 선제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10월 선제 총력대응 이후 월차 생리휴가 폐지 등 노동조건 개악문제나 구조조정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0월 이후 총력투쟁의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개인적으로 자본과 정권의 노동조건 개악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12월에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총파업 돌입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조합원의 파업찬반 투표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하반기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반기 투쟁평가에서 드러났듯이 결의에 따른 힘있는 조직화와 집행의 책임성이다. 올바른 결정도 이에 따른 집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독자성을 기초로 한 지지·연대의 관계로 설정하고, 이후 책임 있는 결정과 집행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정치위원회의 정례화, 정치자금 모집, 정치교육 활성화, 사전논의와 방침의 공유 등 일상적 정치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적 사업을 기초로 당내 각급 의결기구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당의 정책과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바람직한 관계를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